

## ‘소프트웨어 제값 받기’, 정부가 나섭니다!

상용SW기업을 운영 중인 A씨는 자사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후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매년 재계약때마다 기관에서 요구하는 유지관리대가를 그대로 수용해 오다보니 제품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R&D 등에 재투자할 여력이 점점 없어집니다. 중소 SI(시스템 통합) 기업을 운영 중인 B씨는 직원의 임금은 점점 높아가는데 정부 단가가 4년간 그대로여서 공공사업에 들어가면 수익을 내기가 너무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내 주요 지식기반 사업인 SW산업 발전을 위해 SW분야 임금상승률을 감안한 SW사업 표준개발단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용SW 유지 관리요율 산정기준 마련으로 대가지급을 현실화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부문의 SW 예산편성 단가를 상향 조정해 SW기업의 공공사업 수주 환경이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 공공 SW사업에 참여하는 중소 · 전문 SW기업 매출이 약 1,500억원 증가 예상



### 개선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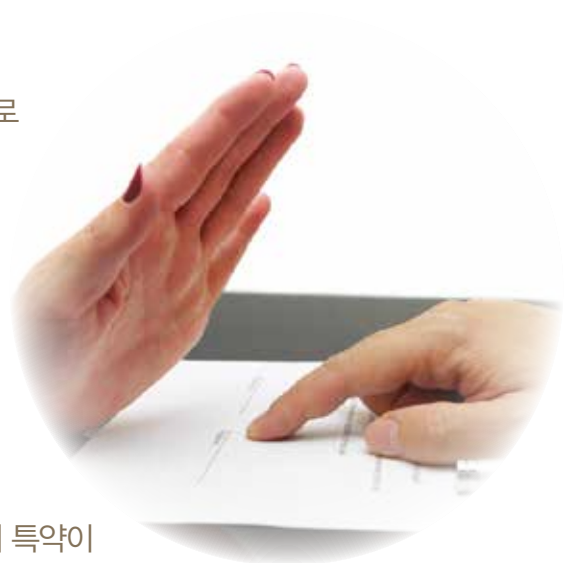
SW개발사업 표준단가 : 497,427원  
상용SW 유지관리요율 : 8%

### 개선 후

SW개발사업 표준단가 519,203원으로 상향  
상용SW 유지관리요율 산정기준 명문화 : 기준요율 12%  
'SW사업대가 산정 가이드' 개정 (미래부, '14.5월)

# 업체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계약, 이젠 그만!

“공사계약을 하다보면 이런 저런 불리한 조건에 합의하는 일이 많습니다.” 건설사를 운영하는 A씨의 탄원입니다. 그는 민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중소기업이 부담한다든지 필요이상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특약조건이 많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계약내용은 중소기업에게 많은 피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금지되지 않고, 당사자끼리 합의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그 간 단속의 사각에 놓여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내용의 특약이 금지됩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요구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일이나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들을 중소기업에게 부담시키는 약정들이 모두 부당특약으로 규제됩니다. 부당특약을 정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삭제명령과 함께 과징금 및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 개선 전

부당한 내용의 특약이라도 당사자간 합의라는 이유로 규제하지 않음

## 개선 후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 금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공정위, '14.2월)